

2013. 5. Vol 222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연산홍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창밖을 보니
때 되어 붉은 꽃 피었다며
연산홍이 손을 흔든다.

천자문(千字文) 한 자 읽지 않았을 네가
인터넷 포털의 검색창도 알지 못할 네가
지혜 찾아 발자국 한 번 뎌 적 없을 네가
태양 겹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만드는
사계절 변화를 훤히 꿰뚫어
꽃을 피울 때를 알다니 놀랍구나.
온도와 습도, 양분을 이용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재주가
참으로 놀랍구나.

알람에 의지해 깨어 난 아침
하늘을 향해 입을 연 연산홍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보듬는 *천망(天網)을 본다.

* 천망(天網-하늘 그물) :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 그물은 넓어서 성기어도 빠뜨리는 게 없다)'이라는 말에서 인용



민병완

- 주요경력 : 전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
- 저 서 : '잠든자의 하늘에는 별이 뜨지 않는다' 등
4권의 소설집 발간

Contents

2013. 5. Vol 222



진천농다리

진천읍 세금천에 놓여 있는 다리.
고려때 축조된 이 다리는 작은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쌓아 올린 후, 지네
모양을 본떠 길게 늘어 만들어 졌다.

- 4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활동
- 6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 8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노력
- 9 베트남 빈곤통의회와 협력방안 논의
- 10 지역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충북도의회
- 12 충북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 13 상임위원회 활동
- 20 대집행부 질문·답변
- 24 주요 처리의안
- 26 5분발언
- 27 도민 칼럼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 충청북도의회는 4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했다.

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앞장

민·관·정 공동대책위 참여 · 결의문 채택 · 성명서 발표

“지방 죽이기 안된다”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처키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이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유완백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지난 4월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정 공동대책회의에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충청권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정 공동대책회의에는 도의회와 충청북도,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민간부문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참가했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충북도당과 통합진보당충북도당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계에서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

하고 전국 차원의 공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대응논리도 개발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중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조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의지 결집을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연대해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가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개정하려다 중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

려하자 도의회는 지난 4월 26일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지키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은 다행히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도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피해화 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도의회 대응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2011. 1. 27.)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2012. 9. 21.)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체 간담회 (2012. 10. 9.)
-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2013. 1. 22.)
-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2013. 1. 31.)
-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2013. 2. 18.)
-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2013. 2. 19.)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발표 (2013. 3. 6.)
-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2013. 3. 15.)
-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 공동성명서 발표 (2013. 3. 25.)
-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2013. 4. 26.)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요구 성명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마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지키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대



▲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4월 26일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연히 천명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성공 예감’ 세계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하다



▲ 5월 3일 충북에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국내외 367개 관련 기업과 바이어 2천여명 참여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지난 3일 화려하게 개막돼 한국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전국은 물론 세계 관련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성공적인 개최를 예감하게 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화장품·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KTX오송역 부근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오는 26일까지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펼쳐진다. 주제전시와 특별전시, 체험 등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꾸며졌다.

월드뷰티관은 황진이의 화장법을 입체영상으로 감상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생명뷰티관에서는 융복합 산업으로 부상한 뷰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고 세계뷰티인형관에는 600여점의 세계인형을 감상할 수 있다. 오감을 자극해 지친 몸을 치료해주는 힐링체험관에서는 피톤치드와 산소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주력 상품을 소개하는 화장품 산업관과 뷰티 용품제조업체와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뷰티 산업관,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뷰티 마켓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367개의 화장품·뷰티기업과 2천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한다.

전시관마다 특성있는 프로그램 ‘가득’

▶ **월드뷰티관** 월드뷰티관은 동서양 아름다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면서 지구촌을 장악해 나갈 ‘코리안뷰티’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아름다움의 역사를 통해 과거 절세미인들의 미용비방을 알아보고, K뷰티를 조명하는 총 5개의 존으로 구성했다.

▶ **생명뷰티관** 생명뷰티관은 IT, BT, NT, 발효기술 등 첨단 과학과 융·복합하고 있는 화장품·뷰티산업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노화를 억제하면서 젊은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과학과 기술을 6개의 존에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또한 피

부 특성 타워를 통해 자신의 피부를 진단받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세계뷰티인형관** 세계뷰티인형관은 90여개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은 약 600여점의 인형을 통해 각국의 뷰티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5대양 6대 주의 민속을 통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 **한류문화관** 한류문화관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드라마 한류와, K팝, K뷰티의 뿌리를 5천년 동안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전시관으로 한국의 혼, 한국의 인물, K-월드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마지막 공간인 K-월드에는 조선화 사진작가의 스타 사진 전으로 꾸며졌다.

❖ **산업관** 산업전시는 화장품산업관, 뷰티산업관, 뷰티마켓으로 구성됐다. 산업전시에는 해외 17개국의 47개사를 포함한 국

내외 36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 300개 기업을 초과한 것으로 목표지의 122.3%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산업전시 중 화장품 산업관은 기업과 바이어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B2B 전용관으로 국내외 화장품 기업과 원료업체, OEM, ODM 등이 참여한다.

뷰티체험을 위한 공간도 있다. 전문가가 직접 피부와 두피를 측정하고 상담해 주는 뷰티체험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뷰티체험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직업체험존으로 운영한다.

❖ **힐링체험관** 힐링체험관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아름다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후각과 청각, 시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의회, 각 지역 홍보·지원으로 성공 개최 뒷받침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인 홍보는 물론 준비상황 점검 및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도의회는 지난 3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오송 화장품·세계뷰티박람회 홍보 발대식을 개최한 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벌였다.

도의회는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김광수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박람회를 홍보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직접 방문해 박람회 홍보물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박람회 입장권 예매 협조를 구하는 등 박람회를 알렸다.

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 점검과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 위원들은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확인도 함께 박람회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번 2013 오송 화장품·세계뷰티박람회가 한국 화장품뷰티산업을 글로벌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원지로 부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끝까지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도의회는 3월 5일 회의실에서 2013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홍보 발대식을 갖고 시·도를 순회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 안된다’ 저지 대응

성명서 · 본회의 건의문 채택해 관계 부처에 요구

충북도의회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4월 26일에는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온천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었던 문장대온천개발의 재추진을 규탄하고 상주시 및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또한 정현의원(괴산)은 31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과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결집된 의지를 모아 온천개발을 저지하자”고 역설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괴산군민을 비롯한 도민들과 힘을 합쳐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건의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 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충북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다시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온천 관광지 개발로부터 얻는 이익보다는 온천에서 발생될 오수로 인해 인근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중한 청정환경의 자산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 문장대온천 관광지 저지운동 추진상황 ■

- 대법원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 (2003년, 2009년)
- ◆ 2013년 추진
 -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요청
(2. 27.) 상주시 → 괴산군
 - 청천면 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3. 6.) 80명
 - 괴산군 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3. 7.) 140명
 - 도에서 주민설명회 참석 및 의견제출 협조요청
(3. 8.) 충주시 및 환경단체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도 반대 의견 제출 (3. 11.)
 - 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 반대 의견 제시
(3. 13.) 200명
 - 충청북도 저지 실무위원회 구성 (3. 18.)
 - 괴산군의회 상주시 방문 철회요구서 전달 (3. 18.)
 -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괴산군민 쉼기대회 (3. 19.)
 - 충주시 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3. 28.) 47개 단체
 -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협조요청
(3. 29.) 도지사 → 환경부장관
 - 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성명 (3. 15.)
 - 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
(4. 24.)
 -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협조요청
(4. 25.) 도지사 → 환경부장관

충북기업과 교류 지원, 뷰티박람회 대표단 파견 요청 충북도의회-베트남 빈푹성의회 협력 강화키로



▲ 충청북도의회는 3월 25일 베트남 빈푹성의회를 방문해 좌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충청북도의회가 베트남 빈푹성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 대표단(단장 김동환 부의장)은 베트남 빈푹성의회 의장 초청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빈푹성의회를 공식 방문해 회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도내 우수기업 판로개척 및 양 지역 간 유대강화를 위해 도내 곡물건조기 업체인 신흥기업(주)과 공동으로 곡물건조기와 자동화의 곡물파종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으며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웬반치 빈푹성의회 부의장은 “곡물건조기 및 곡물파종기 무상지원을 적극 환영하면서

충청북도와 빈푹성의 상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충북기업과 교류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올해 5월에 충청북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빈푹성의회 방문에서 곡물건조기, 곡물파종기 무상지원과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협의는 양 지역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문 시 협의된 건에 대해서는 빈푹성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 과제 해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토론회

— 경자청 위치 · 지역균형 발전 방안 열띤 토론



▲ 3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건설과 지역차원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역차원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의 인사말과 충북개발연구원 윤영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CBS 변상옥 본부장 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위치와 지역균형발전, 도민통합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차태환 청주·청원 유지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충주 유지위원, 박상연 중부매일본부장, 박운홍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정원 충청매일편집국장,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신모 청주대학교 교수,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우종 충청북도 경제통

상국장이 참여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견을 개진했다.

김광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충북을 글로벌 투자지역으로 성장케 하는 발판”이라며 “충북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 강조했다.



앞장서는 충북도의회

방문 건강관리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위한 지자체 노력 강조

방문건강관리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충북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방문인력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의 주관으로 도·시·군 및 보건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작년 12월 최미애, 장선배, 손문규, 노광기, 김도경 의원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벌였던 ‘충북 방문건강관리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당사자인 일선 방문간호사 및 관계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양인철 국장(공공비정규직 노조)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 방문인력들의 처우는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는 이미애 교수(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과), 임명순 방문건강관리사(진천보건소), 김준환 교수(충청대 사회복지학부)가 나와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직무능력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 4월 19일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방문인력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수도권 · 비수도권 상생발전 방안 모색

충청북도의회는 3월 15일 ‘수도권 규제완화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서는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를 초빙해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특성, 지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새로 출범한 제18대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과 수도권 관리정책의 예

측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전국연대 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의 한국사회 지역간, 수도권 · 비수도권간의 격차구조,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개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건의문 채택 등 현안 협의

전국 시·도회의의장 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5월 3일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의장협의회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제출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 연장운행 축구 건의문 채택의 건',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 축구 건의문 채택의 건', '누리와 정 국비지원 확대 재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협의회에서 제출한 '기간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 공공요금(우편요금) 지원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반구대암각



▲ 전국 의장협의회는 5월 3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회의 의장협의회를 개최해 현안을 협의했다.

화 보존대책 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협의회장이 제의한 '자기 회의장소 선정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지역과 지방의회의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의장협의회는 회의 후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전시관을 관람했다.

광서장족자치구 도의회 방문해 협력방안 협의

— 뷰티세계박람회 관람 및 양지역간 실무협의



▲ 5월 3일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대표단이 도의회 방문해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 유신문 상무위 부주임 등 13명의 대표단이 5월 3일 충청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광서장족대표단은 충청북도의회(김광수 의장)와 좌담회를 갖고 바이오산업, 농업연수, 2015 유기농엑스포 홍보 및 참가요청 등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우호증진과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막식에 참가해 월드뷰티관, 화장품산업관 등 전시관을 관람하고, 역사의 숨결이 깃든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를 견학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5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3월 15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교육청 관련 용어정비와 2006년 이후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현실화 등을 위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한강수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4월 15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 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문가·유경험자 4명 등 총 10명이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게 된다.

4월 24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대집행부질문 및 의안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임시회 일정은 5월 6일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는 휴회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 4월 15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충북 개최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충북도의회 방문 등 총 7건을 협의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18·319회 임시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위주 의정활동 벌여



▲ 4월 16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해 유영경 소장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10억 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운영기간의 연장 필요성,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개최 예산증액 사유,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 등 주요현안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오송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3월 11일과 12일에는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회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며 수도권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위주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4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현재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4월 19일 개최된 충북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방문인력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사업 추진상황과 방문건강관리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방문 건강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내 최초로 마련했다.

4월 23일에는 5월 3일 개막되는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행사장을 방문해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점검과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문장대 온천 반대 · 경제자유구역청 조례 심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에서는 현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활용방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또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청원·청주통합추진단 등 위원회 소관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비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정책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19회 임시회 중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에서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정부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의정참여단과 함께 실시한 청주시 금천동에 소재한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공원조성 사업과 편의시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4월 16일 의정참여단과 함께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 조성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18 · 319회 임시회)

작지만 강한 농업 · 특화작목 육성 노력 주문



▲ 4월 16일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현황과 기능성 유색미 품종별 재배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육성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작지만 강한 농가(강소농) 육성을 통해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농가육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병해충 진단장비 보강을 통해 대 농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각종 협력단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3월 6일 실시한 '협동조합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을 순회하며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화장품 · 뷰티 세계박람회를 홍보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경제통상국 및 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농업기술원의 식물공장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4월 15일 경제통상국으로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조직구성안과 예비비 사용계획 등을 청취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여부는 기업유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인 충북발전연구원 소속의 자문위원 및 의정참여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며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어 4월 16일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농업기술원의 식물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농민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회 추경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318회 임시회 기간 중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도로개설에 대한 신규 사업발굴이 기준과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장·단기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 해빙기 도로의 포트홀 보수, 비포장도로 관리 및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오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지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해 노후주택거주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검토와 도의 조례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은 2013 화장품·뷰티세제박람회 홍보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부산·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31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자문위원 간담회,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4월 16일 개최된 자문위원간담회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와 행정학과 이재은교수가 참석하여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미국의 재난관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4월 23일 옥천군 장야리~매화리(지방도5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동이 소도~암거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동군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와인제조설비 등 와인산업과 관련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영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4월 23일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매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18 · 319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해 관리실태 확인



▲ 3월 6일 충주시 금릉동 유흥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현지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3월 6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주시 미할용 부지를 방문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부지 관리실태를 시찰했다.

또한 이날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원안가결에 따라 괴산군 송면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 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원군 오창읍 창리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제31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북 도내 학교 도서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상필 의원 외 6명이 제안한 「충청북도 학교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4월 22일과 23일에는 도내 지역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색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기능을 최대한 살려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로 이송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10억원이 증액된 3조 5,194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1,706억원(5.4%) 증액된 3조 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당초 예산 보다 107억원 증액된 4,905억원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시간의 마라톤 심사를 통해 총 12건에 8억 4,45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04억 5,605만 6천원이 증액된 3조 5,193억 8,155만 4천원으로 확정됐다(예비비로 증액, 총액 변동 없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계상한 점과 사업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예산편성 사례 등을 지적했다.

감액내역은 충북학연구사업 등 과다계상된 7개 사업비는 일부를 삭감했으며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사전절차가 미비한 충청북도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사업,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원회는 이번에 실시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및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결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다.

특히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타 시·군으로 확대시행 할 것과 옥천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북도와 사전협의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 3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 교육행정 실천”

이광희 의원
(교육위원회)



부정행위 사건 감사 관련

[질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내부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감사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교육청의 자체조사 결과 집단부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학부모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안에 따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소송 관련

[질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행정소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사안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질문] 학교회계직 인력 배치 및 운용계획을 통해 교섭을 하기 전부터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단체 협상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학교직원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계획은 단체교섭공고 이전에 시행한 것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교섭은 행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정당 후원교사 징계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전고법 판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고등법원까지 판결결과 무고한 교사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답변] 당초 우리교육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책임 문

제를 논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치원 임용고사 관련 행정소송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며, 이러한 소송들이 끝내 패소한다면 그 소송을 고집하도록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답변] 이 소송은 교과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이 관련된 사항으로, 교과부의 방침과 반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사조직 관련

[질문] 감사원 인사조직업무 감사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성 없이 근무성적을 평정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인사위원회 심의안 누락건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며,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사료됩니다.

[질문] 교육청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향후 인사행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교육감님께서 '6년 연속 청렴도 우수교육청'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둘째, 성적위주·평가위주의 교육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올바른 창의 인성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협상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충북교육의 조직 풍토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태도 부탁드립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도의 발전정책 마련해야”

김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 발전정책 관련

[질문] 새정부 출범에 따라 충북도가 특별히 변화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새정부에서 만든 140개 국정과제에 우리 도에서 요구한 바이오, 태양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등 3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박근혜 후보시절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 중 7가지가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약 7가지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소송 관련

[질문] 강원도의 경우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국책화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몫이 무엇인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와 충북의 현안을 잘 연계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전략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기획관리실장이 실무단장이 돼서 국정과제나 공약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과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보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질문]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1조 9,942억원이 필요한데 이중 국비는 2,239억원으로 11%이며, 1조 6,918억원은 민자로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경자구역을 지정 받고 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우리 충북은 지정받은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똑같이 지정 받은 강원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4월에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이 개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는 4월 개청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경자구역청의 정원이 승인되는 시기는 강원도나 우리 도나 마찬가지이며 4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5월이나 6월에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인천경자구역청의 경우 항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조성 원가도 130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와 관련하여 작은 충북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단계에서 청사위치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청원군민과 충주시민들의 청사유치 활동은 애항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며 해당지역 주민과 전체 도민,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선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질문] 시·군 공무원의 경자구역청 파견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는 충북도 자원만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사실이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자구역청 정원을 도에서 다 차지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은 없으며 행안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집행부 질문·답변 (제319회 임시회)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2014년에 착공해야”

권기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제천~평창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질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추진되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사업은 우리 도가 올림픽 배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건의와 총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4년도 공사착공 계획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연계가 아닌 별도의 구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사업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강원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회 유치를 위한 IOC 현장실사 때 발표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경기대회지원 실무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7월에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강원도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올림픽관련사업에 포함 추진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축산농가 지원 대책 관련

[질문] 축산농가 화생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시름에 빠진 이유와 대책, 그리고 축산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추진상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모든 감축계획에 대

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몫이 무엇인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와 충북의 현안을 잘 연계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전략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축산업의 어려움이 처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우, 돼지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둘째, 높은 수입사료 의존도입니다.

셋째, 복잡한 다단계 유통체계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성장 위주로 적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모든 8,846두를 8월까지 감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로 증산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1,050억원을 1.5%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천 학생회관 사업 관련

[질문] 제천학생회관건립과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아 교육감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시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행정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2016년 영어체험센터 개원 이후 공연장을 포함한 제천학생회관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이지만 상황과 예산 등에 따라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임기 내 착공한 공약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 문제 해결책 마련 절실”

이광희 의원
(교육위원회)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관련

[질문]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내 사회적 기업은 총 100개고 종사자는 1,070명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사회적 기업 육성 취지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둘째 사회서비스 확충, 셋째 지역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넷째 윤리적 시장 확산입니다.

[질문]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예산이 동결되어 못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소 줄이고, 간접적인 지원 형태인 사업개발비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올해 필요한 예산이 일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 관련

[질문] 인건비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의 몇 %나 됩니까?

[답변] 2013년도 기준으로 73.4%정도 됩니다.

[질문] 사회적 기업 총 64개소에서 456명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 50%인 220명이 취약계층이지요

[답변]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매년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답변] 예 3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지원을 중단한 인원이 몇 % 정도나 됩니까?

[답변] 2011년도에 70명, 2012년도에 30명으로 전체인원 대비 17.9%가 되겠습니다.

[질문] 현재 충북도에서는 그렇게 정책적 결정을 하였다고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국비 지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지금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답변] 현재 64개 기업을 기준으로 7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로 지원을 해왔고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들에 채용했던 근로자들을 구조조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구조조정된 근로자는 다시 그 기업에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재고용될 수 없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확산정책 관련

[질문] 충북에서 사회적 기업이 꼭 지켜가고 확산시켜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뭐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답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재원을 다시 산정하고, 우선 충북도 차원에서 부족한 자원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필요예산을 추가로 책정하고, 2014년도 예산 또한 필요분 만큼 확보하도록 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처럼 내년에도 예산을 동결한다면,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우리 도의회는 전국시도시장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8대 의회(‘10. 7. 1)부터 교육청 결산 승인업무를 도의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교육청 관련 용어정비
- 결산검사 참여위원에게 지급한 일비가 지난 ’06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상황조정이 필요하고, 명칭도 일비에서 수당으로 변경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제안자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새 정부 출범 및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 더욱 부각
-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촉구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하여 도의회에서 지역 역량결집 및 주도적이고 선도적 역할 필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표발의 : 김재중 의원)

-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최근,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중지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바, 청정과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한강수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인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와인연구소 부속건물 신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장소 변경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현 의원)

- 충청북도의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단지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완백 의원)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 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보완하고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공유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

제319회 임시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시가 시행하는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매각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기능의 이관 등 조정 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장병학 의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상필 의원)

- 충북도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강화와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의자 : 의장)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 타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군입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수수료 징수 면제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구로서 앞으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를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 위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기간 연장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충청북도의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도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도민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게 될 근거가 마련됐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150만원 한도) 만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채권의 매입 면제기간을 2년간(2012년 말 종료 → 2014년 말까지) 연장 ▲조례 시행 전(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적용 등이다.



5분발언

제319회 임시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문장대온천 개발 막아야”



정 현 의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 상주지역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또 다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괴산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25년 동안이나 원치 않는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민은 2차례에 걸친 분쟁으로 인한 양 지역의 양금을 풀기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발하려는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처사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자유경제구역 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의 힘을 모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저지해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괴산군민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사파견 · 남북대화 재개에 도의회가 앞장서자”



김도경 의원

지금 한반도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몇 개월째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폐쇄되는 등 남북 간의 모든 소통경로가 단절되었고 정부의 대화제기도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닥친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지난 60년간 지속 되어온 불완전한 정전협정 체계를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 문제해결의 핵심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로서만이 평화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에서 연일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소속과 정당,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충청북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바란다

“도민복지 · 지역발전 노력 지속” 기대

진영진

전 충북도의회 교육자문위원



159만 충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35명의 충북도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충북도의회가 올바른 도정을 펼쳐 나가도록 통제 · 견제 · 감시기능을 발휘하여 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조례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도정에 대하여 건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충북의정(홍보지)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타 시 · 도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되시길 기대하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원에게 바라는 몇 가지 희망을 적어봅니다.

첫째, 지방 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원은 공사 생활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도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도의원의 임기(4년)는 유권자와의 약속

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타 공직선거(예: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나아가 보궐선거로 국고를 손실시키는 행위는 없어야겠습니다.

셋째, 항상 도민에게 의회의 방청을 권장하고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원이나 진정, 건의 등을 접수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 한 후에 의정에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유권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열린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항상 의원은 당선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선거 기간에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은 임기 내에 꼭 실천하여 퇴임 때에는 유권자로부터 박수를 받는 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법규 · 예산 · 감사 · 조례 · 규칙 등에 관련한 깊이 있는 독서와 선진지 견학,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방문,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항시 연구하는 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 연말에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반드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한편 지역을 순회하여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곱째, 항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불우 이웃돕기 운동에 앞장서며 도민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도의회가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의회가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정 활동 **이모저모**



▲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27일 상주시와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지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12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이성만 의장에게 오송 화장품부티 세계박람회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7일 청주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유해화학물질 누출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원인 파악 및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1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4월 23일 영동군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 4월 26일 보은 보덕중학교 학생과 청주 대성중학교 학생 70여명이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의정체험을 하고있다.



▲ 교육위원회는 4월 2일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를 홍보했다.



정 지 속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문화복지도(道) 조성위해 노력해야

문화복지란 말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단어다. 사회복지가 경제적·물질적 복지를 의미한다면 문화복지는 문화적 삶, 일상생활에서의 예술의 향유, 문화적 창조력 증진과 같은 문화감수성의 질이나 양의 문제를 말한다.

문화복지가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의 문제를 확보해야 하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기돼있고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문화헌장에는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재정 2%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등을 문화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강사 파견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과연 문화복지도로 접어들었는가?

박근혜정부가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음에도 충북도의 문화예술재정은 1.19%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6개시·도 중 14위에 불과하다.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

화복지의 전문성을 꾀하고 있다.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인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등 도민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에 8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도비는 21%인 18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기반시설도 공동도서관, 등록미술·박물관, 문화회관 총 105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2,072개의 5%에 불과하며,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꼴찌이다.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문화복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 재정을 전체 예산의 2%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재정의 확보는 문화기반시설 확보와 문화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열악한 도 재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획력을 발휘해 국비확보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 확보이다. 충청북도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문화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 과거 70년대는 경제적 행복을 꿈꾸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적 행복을 꿈꾸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민의 문화적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중국 홍보 성공기

손 문 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3월 17일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홍보사절단 24명 중 한명으로 4박5일간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전에도 세 차례 관광차 중국여행을 했었지만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중국 방문은 나 자신에게 충북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 또 다른 경험이었다.

우리는 오후 3시 1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경 첫 번째 유치 홍보지인 북경에 도착해 내일부터 시작될 홍보 일정검토로 바쁜 첫날 저녁을 보냈다.

다음날(3월18일) 오전 9시부터 지사께서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송 박람회를 소개하시며 중국 관광객들의 유치를 독려 하셨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는 주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 중국 북경시 투자촉진 국장,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 투자공사 관계자, 화장품 이·미용협회, 아웃바운드 여행사, 바이어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홍보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분들의 밝고 환한 얼굴표정들은 오송 박람회를 기꺼이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3월19일 아침식사 후 홍보설명회를 갖기 전 우리 일행은 과거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마당로(馬當路)의 3층 벽돌집을 방문했다. 1926년부터 윤봉길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청사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항쟁하신 선조들 앞에서 스스로 고개가 숙여졌다. 특히 남북으로 갈리어 대치

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화합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폐쇄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현재의 잘못된 상황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100여명의 관람객을 모신 가운데 홍보설명회를 하고, 오후 4시 비행기로 다음 목적지인 호북성을 향했다.

3월 20일 호북성과 우리도와의 관광협력 MOU 체결을 마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절강성 항주로 날아가 화가산장(花家山莊)에서 충북대학교 병원(원장 최재운)과 절강성대학교 부설병원(원장 하조)이 의료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사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유치홍보에 임해 주셨다. 여유없이 짝 짜여진 스케줄에도 피로한 기색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언론사 KBS청주 차영수 부장님과 김영중 차장님, 청주MBC 이병선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 홍보단 일행을 친절히 맞아주시는 이규형 주 중국 대사, 안충기 주 상하이 총영사, 호북성 한광섭 총영사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 목적지였던 저장성 홍보를 끝으로 홍보사절단의 바쁜 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2013 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